

한국 복지태도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건민 (서울대학교)

1. 들어가며: 한국 복지태도 연구에 관한 비판적 평가의 필요성

소득, 자산, 주거, 의료, 교육, 노동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전 영역에 걸쳐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 이례적으로 높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조건 하에서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국가 모습을 누구를 주체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예: 최태욱 편, 2013), 중부담 중복지 복지모델, 고부담 고복지 복지모델 등에 관한 다양한 담론에도 무색하게, 우리 사회의 계층별 복지태도¹⁾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간층, 그리고 특히 고소득층에서 이

* 이건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주택과 복지(국가)와의 관계, 기본소득, 사회적·생태적 전환, 복지국가 담론 및 정책, 이데올로기 비판 등입니다.

1) 복지태도(welfare attitude)는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 복지인식(welfare perception), 복지선호(welfare preference), 복지정책(/제도/분야/영역)에 대한 지지 등의 용어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개념이며, 실제로 엄밀한 개념 구분 없이 이들 용어를 혼용한 연구들도 많다(이광훈·김권식, 2012: 97-99). 특히 복지의식과 관련하여 복지태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섭(2009)은 복지의식은 복지에 대한 감정, 신념, 원칙 등의 가치 영역으로,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초한 행동의 양식, 성향, 태도 등의 행동지향 영역으로 서로 구분하여 위치 짓고 있다. 반면 복지의식을 “인간의 복지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제도,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태도 혹은 의식”으로 개념화하는 김상균(1994: 122)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가치 영역과 행동지향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가치 영역의 복지의식 연구와 행동지향 영역의 복지태도 연구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본고의 목적상 가치 영역에 속

러한 경향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겨레, 2015).

2007년과 2013년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과를 보고 그간 중간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복지태도가 부정적이었던 저소득층의 복지국가 지지가 중간층과 고소득층을 넘어서게 된 것을 복지태도의 ‘정상적 경로’(한겨레, 2015)로 해석한 것은 매우 일면적인 평가로 보인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태도 점수는 72.30점에서 72.31점으로 0.01점이 상승했을 뿐이며, 중간층은 72.90점에서 70.69점으로 2.21점, 고소득층은 72.47점에서 68.66점으로 3.81점이나 하락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우려해야 할 지점은 사회 전반적인 복지태도의 후퇴, 그리고 특히 고소득층과 중간층에서의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복지태도 변화이다.

복지태도는 사회복지 확대, 조세제도 개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둘러싼 담론정치, 투표행위(배진희·신정관, 2014)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복지국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태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며 원인을 분석해야 할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복지태도는 국가복지의 확대, 누진적 조세체계로의 개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 복지국가 만들기 실천에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태도의 전반적 후퇴 현상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의 연구들이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특성, 결정요인, 추이 변화 설명요인을 얼마나 잘 분석해왔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관련해서 계급·계층적 요인, 자기이해 요인, 복지지위(복지수혜자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 지위, 복지납세자 지위)(안상훈, 2000a; 2000b; 2005)를 둘러싼 다양한 균열 요인, 개인이 갖는 신념, 이데올로기 등 가치적 요인, 사회 규범 및 학습 요인, 국가의 정책과 정치에 대한 신뢰 요인 등의 설명력을 검증, 확인하기 위한 방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과의 비교 맥락에서 ‘이중성’(최균·류진석, 2000), ‘비계급성’과 ‘비일관성’(김영순·여유진, 2011), 계급·계층적 요인의 약한 설명력, 보수·진보 스펙트럼의 특수성 등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갖는 특성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 결과 해석의 타당성 등에서 의심스러운 부분, 반드시 확인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선택의 적절성 문제, 누락변수 문제(omitted variable bias), 모형설정 오류 문제(model specification error problem), 분석 결과의 해석 문제, 설문조사 문항의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수많은 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쏟아져 나오므로 인해 오히려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

하는 ‘복지의식’과 행동지향 영역에 속하는 ‘복지태도’를 묶어서 ‘복지태도’라는 단일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물론 기존 연구를 소개, 인용하는 맥락에서는 각 저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소,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복지태도 연구들을 위에서 제시한 세부사항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 연구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특정 이론에 기초하지 않은 탐색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던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3절에서는 서로 다른 이론들 간 경합 구도에 입각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형화된 사실’과 ‘정형화된 문제’를 각각 도출하고 향후 연구에의 함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결론인 4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전의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주목할 만한 최근의 새로운 흐름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아직까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남은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2.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 탐색적 수준의 연구 / 흥미로운 관점과 거시적 시각의 선취

김영모(1980)의 연구 이래로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몇몇 연구들(예: 서상목, 1981; 김상균, 1985; 1994; 김영모, 1985; 1991;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5; 김성한, 1990; 김상균·정원오, 1995)이 수행되었다.²⁾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창기 복지태도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명시적인 이론에 기반 하지 않고 변수와 범주가 설정되는 등 탐색적 수준의 연구에 머무른 점, 분석방법상의 문제점³⁾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 또한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히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였던 관점의 단초가 이 시기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김상균·정원오(1995)에서 잘 드러난다. 저

2) 김상균·정원오(1995)는 한국에서 수행된 최초의 복지태도 연구로 최일섭의 1977년 박사학위논문을 들고 있다. 하지만 최일섭의 연구는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정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과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김영모(1980)는 빈곤, 실업, 교육, 주택, 질병, 노인, 복지권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전국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영모의 1980년 연구를 국내에서 행해진 최초의 복지태도 연구로 제시한다.

3) 예를 들어, 김영모(1980)는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상균·정원오(1995)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채 두 변수 간 t 검정, ANOVA 검정에 그치고 있으며, 의료, 교육, 실업, 조세, 주택, 장애, 평등, 사회복지에 대한 편견, 사회복지와 국가경제 간 관계 등 서로 이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수를 단순 합계하여 종속변수로서 복지인식을 조작적으로 정의·측정하고 있다.

자들은 독립변수로 성, 연령, 학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좌-우 지향성,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주관적 계층 판단, 소득수준, 직업, 출신지역을 포함하고 있다.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복지태도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신념,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 정치제도 등 정치적 요소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과 객관적 계층(소득, 직종)을 함께 고려한 것은 계층의식과 복지태도가 비단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신념, 가치 등 주관적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시각을 선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출신지역을 변수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저자들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이하로 출신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사안이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복지태도에 있어 지역적 요인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점점 더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상균·정원오(1995)는 1993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득계층별 복지의식 분석결과를 1979년 조사를 토대로 한 김영모(1980)의 연구와 비교하면서, 1979년과는 달리 1993년 시점에서 중상층에 비한 하층의 복지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정치적 민주화와 빈민 및 노동 운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시민권이 복지권을 비롯한 사회권으로 발전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고 있는데,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별 변화에 대한 비교, 시대 변화에 대한 민감한 고려와 과감한 가추의 시도,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사회적 요인, 사건(event)과 시대 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은 안타깝게도 변수 간 인과관계 탐지와 서로 경합하는 이론들 간 경쟁·경합에 골몰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논의구도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거나 잠복해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의 복지의식 비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각국의 사회 복지발달사, 이데올로기의 맥락과 연결 지으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한 신섭중·박병현(1995)의 연구 역시 주목할 만하다.

3.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 이론들 간 경합 구도의 형성과 분석방법론상의 진전 / 다양한 혼란의 생성과 거시적 관점의 탈각

기존의 탐색적 연구에서 벗어나 1990년대 중반부터 권력자원론, 자기이해론, 복지지위론

4) 여기서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변수는 1987년 민주화, 1993년 군부독재정부에서 문민정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등 다양한 이론에 기초한 변수의 명확한 선택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 요인분석, 잠재평균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예: 김영란, 1995; 김희자, 1996).

이 시기의 주요한 연구흐름과 논의는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있어 계급·계층론(대표적으로, 권력자원론), 자기이해론, 복지지위론 등의 다양한 이론의 설명력에 대한 검증, 경합하는 이론들 간 상대적 설명력에 대한 비교, 판단, 해석에 집중되었다. 아울러 이론 간 경합의 맥락에서 수행된 다양한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드러난 것으로 합의된)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갖는 독특한 ‘모순성’이 ‘이중성’(최균·류진석, 2000) 등의 개념으로 명명되었으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제출되었다.⁵⁾ 이 시기에 수행된 복지태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 세 가지 경합하는 이론들, 즉 권력자원론, 자기이해론, 복지지위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 자기이해론(self-interest theory), 복지지위론(welfare status theory)은 광의의 의미, 높은 추상수준에서 보면 다양한 복지정책(제도)을 둘러싼 자기이해(self-interest)와 균열(cleavage)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먼저 권력자원론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균열이 노동자 계급(친복지적이며, 국가복지의 확대에 찬성)과 자본가 계급(반복지적이며,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복지정책의 전선 역시 계급정당과 노동조합 등 계급적 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본다(Korpi, 1980; 1989). 다음으로 자기이해론은 성, 연령, 장애 여부, 숙련의 수준 및 특성 등에 따라 각각의 복지정책마다 이해관계의 균열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고, 복지제도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열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한다(김사현, 2010a).⁶⁾ 아울러 이해관계의 균열이 치열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전통적으로 주목해온 노동과 복지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택과 소비의 영역에서 이해관계의 균열(예: Rex와 Moore의 주거계층론, Saunders의 소비주의 도시론)이 더 첨예한 양상으로 발견된다는 논의 또한 전개되었다(조명래, 1997; 2002: 제5장; 천현숙, 1997). 마지막으로 복지지위론은 계급균열의 배타적 독점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권력자원론을 비롯한 기존의 계급·계층론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는 동시에, 이해관계 균열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이해론의 일면성 또한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안상훈, 2000a; 2000b;

5) 본고는 이러한 판단과 주장이 선불리 제출된 것이며 이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 중 상당수가 약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제들의 개입 가능성을 도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6) 자기이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결과로는 Andreß and Heien(2001), Jaeger(2006), Blekesaune(2007), 김수완(2011), 이현주 외(2013), 이선우(2015) 등이 있다.

2005). 상술하자면 안상훈은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라는 세 가지 틀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균열을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수혜층을 넓힘으로써 친복지동맹세력, 복지국가 지지세력을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안상훈, 2000a; 2000b; 2005; 2009 등 다수).

이 시기에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데이터, 분석방법, 투입된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등이 다양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도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의 병렬적인 선행연구 검토 방법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7가지와 ‘정형화된 문제’ 2가지를 드러내는 독특한 접근법을 취하고자 한다.

먼저 ‘정형화된 사실’ 7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계급·계층 간 이해관계 균열은 여전히 발견된다.

김희자(1999)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평등/차등 체계에 관한 태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한 판단, 계급별 및 소득수준별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계급, 소득, 계급귀속의식 변수는 5개 영역 중 2개 영역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돈문(2001)의 연구는 집계된 자료를 분해해서 볼 경우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가 뚜렷이 발견됨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즉 그는 복지의식의 차이가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 간에 발견될 뿐만 아니라, 비소유계급 내에서는 공사부문 간에도 나타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계된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제시는 항목별 복지세금 의식의 계급간 차이와 공적 부문의 내적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존재하는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를 은폐하거나 중화시킨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지정치의 실천적 구상과도 밀접히 연관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전통적인 노동자계급에 더하여 뿌띠 부르주아 계급, 공적 서비스 부문 노동자, 여성 등을 포괄하는 복지연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②프로그램별, 영역별, 대상별 이해관계 균열 역시 확인된다.

김희자(1999)는 국가복지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서의 국가복지 확대지지와 세금부담의사 정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성, 연령 등이 미치는 영향이 각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성균(2002)은 복지수혜대

상별로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도가 서로 다름을 드러냈으며, 특히 계급 간 복지의식의 수렴/분화 현상 역시 복지수혜대상별로 서로 엇갈림을 확인하였다.

③성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 방향성은 연구에 따라서 엇갈린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국가복지 확대를 더 지지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김희자(1999)는 여성이 남성보다 국가복지 확대를 더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연구가설과 상반되는 결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진보적인 사회관”(122)을 가짐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해석과 추측은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복지 영역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서비스 영역이며,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보험의 경우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확대 방향으로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돈문(2001: 162)은 복지의식의 성별효과를 설명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국가 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찬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취업기회,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사회화 과정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복지태도에 미치는 성별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으로 인한 기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로 인한 기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한 기제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백정미·주은선·김은지(2008)는 복지인식에 미치는 성의 영향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그 유의도와 방향성에서 상반되게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이는 성의 영향이 인종, 계층, 교육 등 다른 요인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정 시기, 특정 사회의 맥락에서 성이 계급·계층, 인종 등의 다양한 정체성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④연령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 방향성은 연구마다 차이가 난다.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이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김희자(1999)는 20대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있어 국가복지 확대를 다른 연령대(30대, 40대, 50대 이상)에 비해 더 많이 지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주은선·백정미(2007)는 중위계층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공복지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경우 통계적 유의도가 드러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5% 유의수준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공복지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평등지지도, 잔여적 복지 조세부담 의사, 보편적 복지 조세부담 의사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연령의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종속변수를 무엇으로 하느냐, 사회복지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분석의 대상계층을 묶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각각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연령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와 방향성은 상반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영역에 따라서는 연령의 효과가 비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추가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조진만, 2014). 이는 중장년층이 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지위에 놓이는 반면, 청(소)년층과 노년층은 비교적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다양한 사회복지 부문의 수혜자의 지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갖는다.

⑤계급·계층, 기타 이해관계, 주관적 가치관 변수를 모두 투입할 경우, 다른 변수에 비해 주관적 가치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희자(1999)의 경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국가복지 확대지지와 세금부담의사 정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수로 계급, 소득(이상 계급·계층 변수), 성, 연령, 혼인상태(이상 이해관계 변수), 계층귀속의식, 세금체계에 대한 불만(이상 주관적 가치관 변수) 등을 투입하였다.⁷⁾ 그 결과 세금체계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주관적 가치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주체여야 하느냐 여부를 종속변수로, 성, 학력, 계급지위, 계급행위(노조가입, 파업참여), 사회적 태도(불평등의식지수, 반개인의주의지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성균(2002)은 성과 계급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계급지위와 사회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일부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주은선·백정미(2007) 역시 계층(이상 계급·계층 변수), 성, 연령, 공공복지 경험, 복지수요(이상 이해관계 변수), 정치이념(이상 주관적 가치관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투입하여 평등지지도,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공공복지 지지도 결정요인의 계층별 차이,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각각에 대한 조세부담 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모든 분석에서 정치이념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계층, 성, 연령, 공공복지 경험 변수는 종속변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반면 복지수요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모든 분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계급·계층, 기타 이해관계, 주관적 가치관 변수를 모두 투입할 경우에는 주관적 가치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계급·계층 변수와 기타 이해관계 변수는 구체적인 종속변수가 무엇이나 등

7) 사실 이러한 구분은 많은 연구에서 당연시하고 있으나, 사실 정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에 따라 통계적 유의도가 갈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요약할 수 있다.

⑥계급·계층, 기타 이해관계, 주관적 가치관 변수 중 주관적 가치관 변수가 빠질 경우 계급·계층, 이해관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계급·계층 변수와 기타 이해관계 변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기타 이해관계 변수의 상대적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계급·계층론에 비한 복지지위론의 우위/우수성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상훈(2000a)은 복지지위론에 입각한 변수로 고용부문, 성(이상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 국가복지 수급여부(이상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 세금(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을, 계급론에 입각한 변수로 직업을 투입하여 1995년 수집된 스웨덴 설문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급모형’, ‘복지지위모형’, ‘혼합모형’을 각각 구축한 후 경로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 모형 중에서 ‘복지지위모형’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직업을 계층이 아닌 계급을 대표하는 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복지지위론에 입각한 변수의 수에 비해서 계급론에 입각한 변수의 수가 적다는 점, 세금이라는 연속변수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복지지위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적 설명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과연 복지지위론과 계급론에 입각한 변수들이 설문조사 자료에서 파악한 변수들 중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⁸⁾

뿐만 아니라 안상훈(2005; 2009), 김은지·안상훈(2010) 등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가치관 변수는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에서 일관되게 배제되고 있다.⁹⁾ 만약 계급·계층론이 생산수단 소유 여부, 소득/자산 및 직종 등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즉 ‘즉자적 계급·계층’, ‘객관적 계급·계층’), 주관적인 정치적 이념, 가치관, 신념체계 등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에 동의한다면(즉 ‘대자적 계급·계층’, ‘주관적 계급·계층’), 계급·계층론과 복지지위론 간 상대적 설명력에 관한 안상훈(2000a)의 주장¹⁰⁾은 일면적이거나 지나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국가 지지세력의 형성 및 확산과 관련한 복지정치, 복지국가 전략과도 긴밀히 연관되는 문제인데, 계급·계층론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안상훈(2000a; 2000b; 2009)의 논의 틀 내에서는 계급정당, 노동조합 등을 통한 복지정치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지며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복지수혜세력의 확장이 가장 중요한

8) 또한 성 변수가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만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지, 즉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를 표현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음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다.

9) 백정미·주은선·김은지(2008)의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10) 예를 들어, 안상훈(2009: 174)은 일련의 연구들(예: Ahn, 2000; 안상훈, 2002; 2005)에서 “복지지위의 세 가지 차원들이 기존의 계급분석들 보다 복지태도와 정치적 선호 혹은 투표행위에서 더욱 영향력 있음을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한다.

전략으로 자리매김 된다.¹¹⁾ 또한 이데올로기 비판, 담론정치 등을 둘러싼 광의의 복지정치는 전략적 고려대상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⑦집계(aggregate)해서 볼 때의 그림과 분해(disaggregate)해서 볼 때의 그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집계해서 볼 때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으며, 만약 분해해서 보는 것이 가능할 경우 가급적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이인재(1998)는 조세에 대한 문항을 ‘부유층 세금인상’과 ‘전체 국민 세금인상’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자에 대해서는 ‘전적 찬성’과 ‘약간 찬성’을 합쳐 77.0%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와 ‘전적 반대’를 합하여 70.4%로 오히려 반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희자(2013: 74)는 “계층별 소득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의 세금이 낮다고 생각하며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세금은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4)”라고 서술한다. 이러한 점들은 복지확대 여부와 마찬가지로 세금인상 여부에 관한 지지 역시 소득 계층,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균열 양상을 보이며, 조세 자체가 계급·계층 이슈임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4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에 대한 지지 정도 등으로만 이루어진 설문조사 문항은 매우 불충분하게 구성된 것이며, 이는 복지확대 관련 문항이 영역별, 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불비례적(disproportionate)이며 비대칭적(asymmetrical)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충분한 설문조사 문항은 조세 자체가 계급·계층 이슈임을 가리는 효과를 낳으며, 약한 증거(weak evidence)에 기초한 ‘이중성’(최균·류진석, 2000), ‘비계급성’과 ‘비일관성’(김영순·여유진, 2011) 등의 다소 무리하거나 지나친 개념화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앞서 ①에서 논의한 조돈문(2001)의 연구 역시 집계해서 볼 때의 그림과 분해해서 볼 때의 그림이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정형화된 문제’ 2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구분 문제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청된다.

11) 김은지·안상훈(2010: 312)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그러한 지위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 친복지정치의 실현에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류진석(2004)의 연구이다. 그는 종속변수로서 복지태도의 하위영역을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중요하게 고려하는 독립변수로서 복지규범의 순응 및 가치지향의 구성요소를 사회갈등도, 복지순응성, 분배지향성으로 놓고 있다.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사회갈등도와 분배지향성 역시 내생성(endogeneity) 등 문제제기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순응성¹²⁾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 즉 복지순응성이라는 개념이 과연 이 연구의 세부 종속변수들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다섯 가지 복지태도의 하위영역과는 달리 복지순응성은 종속변수로서 복지태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지의 여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듯 사회갈등도, 분배지향성과는 달리, 복지순응성은 이변수 상관관계 분석에서 모든 복지태도 하위영역과 ‘복지태도’¹³⁾ 변수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속변수를 ‘복지태도’로 두고, 독립변수로 개인특성(성, 연령, 교육년수, 소득수준), 복지이해관계(복지납세자, 복지제공자) 변수, 사회갈등도, 분배지향성, 복지순응성 변수를 모두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도 복지순응성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 회귀계수는 0.442로 매우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R제곱 값 역시 0.1 미만 또는 0.1을 갓 넘는 수준을 보인 기존 연구와는 달리 0.268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사회적 지위변수가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단선론적 분석모델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2004: 97), 이러한 주장 자체는 옳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투입한 복지순응도는 사실 종속변수와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복지태도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이한나·이미라(2010)의 연구 역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구분 문제, 독립변수의 내생성 문제에 대해서 민감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독립변수로서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 ‘세금부담 형평성지각’을, 종속변수로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쟁점은 종속변수로서 ‘복지확대를 위

12) 복지순응성은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또는 복지와 밀접히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상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2004: 88).

13) ‘복지태도’ 변수는 “복지기능의 정당성(6문항),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5문항), 복지원리의 선호성(2문항), 복지공급의 책임성(7문항), 복지재정의 확충(7문항)을 합산하여 생성한 변수”이다(류진석, 2004: 89).

한 증세에 대한 태도'와 (특히)'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와 독립변수로서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 '세금부담 형평성지각'이 과연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의 문제, 후자를 종속변수, 전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유무, 장애유무, 경제활동상태, 저소득가구 여부,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변수는 양자 모두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도 전자가 -0.186, 후자가 -0.111로 다른 추정치들에 비해서 절댓값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구분 문제, 내생성의 문제(예: 류진석, 2004; 이한나·이미라, 2010)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②설문문항의 구성에 있어 일부 연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종속변수 관련 문항일 경우 이로 인한 편의(bias)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안상훈(2005)의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다. 안상훈(2000b: 그림 1)에서 제시된 복지정치의 가설적 인과경로를 바탕으로 저자는 '구조적 이해관계(복지서비스제공자 지위, 복지납세자 지위, 복지수급자 지위)→의식적 태도(친복지적 태도)→표출된 선호(친복지적 정치행위)'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문제는 경로의 마지막에 위치한 복지정치태도/행위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자가 설정한 가상적인 세 명의 정당후보 공약이다. 가상적 복지공약을 오름차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안상훈, 2005: 각주 9). "후보A: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를 너무 강조합니다. 저는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만 주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후보B: "경제를 살리는 것에 힘쓰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전체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점차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C: "현재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만 배부른 사회입니다. 저는 시장자본주의보다는 노동자들과 빈자들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공약 설정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간 관계에 대한 저자의 철학적 태도, 복지정치에 대한 저자의 삼분법적 이해를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과연 친복지적 정치태도를 서열척도로서 적확히 나타낼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으로의 우려가 제기되지는 않는지,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친복지적 정치태도로 설정한 상(image)이 복지지위론에 입각한 친복지동맹 세력 확대와 모순되거나 배치되지는 않는지 등은 전혀 비판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설문문항의 구성에 있어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정형화된 사실'과 '정형화된 문제'를 토대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서로 경합하는 다양한 이론들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석방법상의 진전 역시 눈에 띈다.

②하지만 변수 선택, 모형 구축, 분석 결과 해석 등에 있어서 발견되는 정치경제적 함의, 철학적인 고찰 등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권력자원론, 자기이해론, 복지지지위론 등 다양한 이론들의 설명력 검증, 이들 간의 경합 구도의 형성 및 고착화로 인하여 재생산되고 강화되었다.

③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구분 문제, 독립변수의 내생성 문제, 설문문항의 적절성 및 세부 정도의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단순히 시기, 대상, 자료 등의 차이로 인해 외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연구 설계, 모형 설정, 변수 선택, 분석 방법 등의 문제로 인해 내생적으로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

④변수 선택, 분석 결과 해석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서의 지역적 요인, 자산(주택 포함), 보수-진보 진영 구분의 한국적 맥락 등에 대한 고려 부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⑤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상균·정원오(1995)에서와 같은, 시기별 변화에 대한 비교, 시대 변화에 대한 민감한 고려와 과감한 가추의 시도,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사회적 요인, 사건(event)과 시대 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은 안타깝게도 거의 실종되었다. 비록 회귀분석 없이 빈도분석, t 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까지만 수행하긴 하였으나, 이전 시기 연구와의 비교라는 맥락 속에서 시기별 경향성과 변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이인재(1998)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 확대/축소에 대한 태도’와 ‘증세/감세에 관한 태도’ 간 ‘이중성’(최균·류진석, 2000) 등에 대한 주장이 성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상세히 논한다.

4. 나가며: 2000년대 후반 이래 최근 연구의 성취, 그리고 미해결 과제

지금까지 1980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 복지태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정형화된 사실’과 ‘정형화된 문제’의 발견과 기존 연구의 한계를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들은 비록 탐색적 수준의 연구에 머물렀으나, 흥미로운 관점의 제시와 대담한 해석의 시도, 거시적 시각의 선회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편 탐색적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고자 시도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들은 이론들 간 경합 구도의 형성과 분석방법론상의 다양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 시기 연구들은 설문문항 작성을 비롯한 연구 설계, 모형 설정, 변수 선택, 분석 결과 해석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혼란을 낳았으며, 계급·계층론과 복지지원론 간 경합으로 치우친 논의구도의 형성 및 고착화는 거시적 관점의 탈각과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둔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후반 이래 최근까지의 연구들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연구들이 다수 발견된다. 주요 성과와 주목할 만한 흐름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급·계층론 대 복지지원론(+자기이해론)’이라는 기존 논의구도의 협소한 문제 설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수행되었다(예: 이상록·김형관, 2013). 즉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복지태도의 정향성을 파악함에 초점을 둔 관계로, 친복지적 태도 수준만을 확인함에 초점을 두어 단편적인 복지태도 측정치로 복지태도의 실태 및 양상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었다(이상록·김형관, 2013: 435). 두 번째, 한국인들의 복지태도의 모순성을 개념화한 ‘이중성’(최균·류진석, 2000), ‘비계급성’과 ‘비일관성’(김영순·여유진, 2011) 등의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예: 김사현·홍경준, 2010; 김사현, 2015). 즉 “개인의 복지태도가 모든 정책 쟁점에 대해 일관적이라 가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복지정책의 쟁점별로 태도는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다양한 복지영역 간 복지태도의 차이, 프로그램 특수적 복지태도와 일반적 복지태도 간 차이, 국가복지 확대와 납세의사 간 차이 등의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김사현·홍경준, 2010: 96-97). 이러한 맥락에서 김사현(2015: 30-31)은 ‘이중성’이라는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¹⁴⁾ 이를 감안한다면 상이한 영역의 문항을 단순합산하는 방식 못지

14) 하지만 ‘불일치’에 관한 김사현(2015)의 개념화·유형화는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복지 영역별 정부지출에 관한 5점 척도 문항들을 3개 범주(지출의 ‘증가/유지/감소’)로, 조세부담에 관한 7점 척도 문항들을 3개 범주(증세의 ‘찬성/보통/반대’)로 각각 축소시킨 후 3×3 분할표에서 ‘지출 증가-증세 찬성’, ‘지출 유지-증세 보통’, ‘지출 감소-증세 반대’ 쌍을 제외한 나머지

않게, 요인분석의 과도한 활용 및 무리한 요인 명칭 부여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¹⁵⁾ 세 번째, 한국적 맥락, 특수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예: 이중섭, 2009; 김형관, 2011; 최유석, 2011; 김운태·유승호·이훈희, 2013; 이상록·김형관, 2013; 김운태·서재욱, 2014). 구체적으로 이중섭(2009)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지역주의 정서를 근거로, 최유석(2011)과 김운태·유승호·이훈희(2013)는 각각 정치적 성향, 지지 정당과의 관련성 등 정치적 요소에 주목하여 지역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김형관(2011)은 압축적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으로 인한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격차, 지역균열에 주목하여 수도권/지방, 도/농,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소도시) 변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였다. 김운태·서재욱(2014: 367) 역시 지역주의에 근거한 독특한 정치구조로 인해 “주관적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 주관적 인식, 신뢰, 정치적 선호 등 주관적 가치관과 관련한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예: 김사현, 2010b; 김신영, 2010; 권승, 2012; 김운태·유승호·이훈희, 2013; 노대명·전지현, 2011; 이상록·김형관, 2013; 조진만, 2014; 손동영, 2015; 황아란·이지호, 2015; 이지호·황아란, 2016; 최고은, 2016). 다섯 번째, 복지태도 연구에 있어 시민사회 신뢰, 정당 선호 및 신뢰, 정부 신뢰 및 질, 정치적 선호, 정치적 성향, 정치신뢰, 정치적 기회, 정치적 역동성, 정치적 지식, 정치효능감 등 정치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인지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예: 노대명·전지현, 2011; 최유석, 2011; 김운태·유승호·이훈희, 2013; 서복경·황아란, 2013; 이현우, 2013; 김운태·서재욱, 2014; 조진만, 2014; 이정진·노대명, 2015; 황아란·이지호, 2015; 이지호·황아란, 2016; 최고은, 2016).¹⁶⁾ 여섯 번째, 독립변수

지 6개 쌍을 ‘태도 불일치’ 영역으로 광범하게 설정하여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를 분석하고 있다(김사현, 2015: 표 1 참조). 저자가 기존의 5점 척도와 7점 척도를 각각 3개 범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소시켰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지출 유지-중세 찬성’, ‘지출 감소-중세 찬성’, ‘지출 감소-중세 보통’을 ‘복지비용지지형 불일치’로, ‘지출 증가-중세 보통’, ‘지출 증가-중세 반대’, ‘지출 유지-중세 반대’를 ‘복지비용회피형 불일치’로 개념화·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화·유형화는 태도 ‘불일치’ 영역을 연구자가 기존 범주의 재범주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인위적·자의적으로 생성·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개의 셀 중에서 6개로 지나치게 광범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일치’보다는 ‘불일치’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또한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저자의 개념화·유형화는 더 근본적으로는 복지 영역별, 쟁점별로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지 확대와 조세부담 의사 간 차이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는 그 자신의 견해(김사현·홍경준, 2010: 96-97)와도 일정 부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5) 변수 선택, 요인에 관한 명칭 부여 등에 있어 요인분석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현주 외(2013: 제3장)를 들 수 있다.

16) 물론 황아란·이지호(2015)의 정치결정론적 입장에 기초한 과도한 분석결과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의 내생성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감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예: 김사현, 2010b; 이현주 외, 2013). 이는 태도 변수(독립변수)로서 태도 변수(종속변수)를 설명하고자 시도할 때 독립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이다.¹⁷⁾

일곱 번째, 연령 변수 관련한 모형 설정 및 분석방법 상의 진전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령 변수의 비선형성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며(조진만, 2014), 복지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연령을 연령 효과(aging effect), 세대 효과(cohort effect), 시기 효과(period effect)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예: 이상록·김형관, 2013). 여덟 번째, 복지태도의 분산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예: 최유석, 2011). 아홉 번째, 국가 수준의 정책, 제도,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특성, 정부의 질 등을 명확하게 감안한 다층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김수완, 2011; 이현우, 2013; 박찬웅·정동철·조선미·김노을, 2014).

열 번째, 복지태도에 있어 사회규범,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 주요 사건(event)의 발생과 담론정치의 영향, 세대별 차이 및 세대 효과 등 시기별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인식되고 있다(예: 김사현, 2012; 김운태·유승호·이훈희, 2013; 이상록·김형관, 2013; 홍경준·김민성·김사현, 2013; 이정진·노대명, 2015). 열한 번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의 영역을 기존의 전통적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예: 안상훈·박종연·김수완, 2013).¹⁸⁾ 열두 번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자원으로

17) 올바른 문제제기와 접근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김사현(2010b)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선택한 도구 변수들은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s) 문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Stock, Wright, and Yogo(2002)은 도구변수 회귀계수의 t값이 2.99 이상, F값이 8.96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구변수를 2개 이상 사용할 경우 ‘약한 도구변수’를 판정하는 기준 F값은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사현(2010b)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변수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8)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 밀어붙인다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택시장, 주택정책의 변화 등도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이현주 외(2013)의 연구는 자산이 클수록 복지의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는 대조적으로 가계 자산에서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압축적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었던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 중 하나로서, 자산기반형 복지(asset-based welfare),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김도균, 2013)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소유를 매개로 한 중산층의 형성(김도균, 2013; 장세훈, 2007 등 다수),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와 국가 주도의 재개발(redevelopment) 과정(Shin and Kim, 2015) 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한편 Castles(1998)과 Kemeny(2005)는 자가소유와 복지 간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여러 차원에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 먼저 유동성, 현금 가능성, 할인율(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자산은 장기간에 걸친 일정한 소득흐름(income flow; income stream)을 낳으며,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흐름을 현재가치화한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택소유는 그 자체로 소유주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임차인과는 달리 자가소유자는 임대료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

로서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예: 이현주 외, 2013).¹⁹⁾ 열세 번째, 풍부한 함의를 주는 흥미롭고도 진전된 연구 역시 발견된다(예: 이정진·노대명, 2015). 이정진·노대명(2015)은 자기이해론, 생활경험 등 사회화 요인, 프레이밍 효과 등 이데올로기 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한 복지태도는 유동적이다”, “생활여건의 변화는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복지태도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 정부 및 정치 신뢰 관련한 문항이 풍부하게 조사되지 않는다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국가복지 확대와 납세 의사 간 응답 차이만을 통해서는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모순성’(이중성, 비계급성, 비일관성, 불일치성, 탈계급성 등 모두 포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복지확대 여부와 마찬가지로 세금인상 여부 또한 계급, 소득 계층에 따라 다양한 균열 양상이 존재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증세/감세 관련한 ‘복

다는 점이다(cf. 귀속임대료 개념).

뿐만 아니라 주택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시세차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주택의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가 더 중요하고, 인권으로서 주거권 보장보다는 소유권과 투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더 중시하며, 주택정책이 주거안정성의 확보, 세입자의 권리 보장 등 사회정책적 성격을 띠기보다는 경제활성화와 경기조절의 수단으로서 경제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emeny(2004)는 자가소유가 자동차 소유, 내구재 소비, 문화 등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납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가설적 형태로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하여 필자는 주거권의 법적·제도적 보장 정도 및 형태, 사회주택의 공급 정도 및 형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의 자가소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벌어졌던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국내 논쟁은 주택 및 조세 정책과 복지태도가 긴밀한 관계를 가짐을 방증하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산층의 형성 과정, 중산층의 계급 및 계층 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소유가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감안할 때 주택정책은 (계급·계층론의 관점에서든 복지지위론의 관점에서든)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cf. 김도균, 2013; 장세훈, 2007).

- 19) 최근 들어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점차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Piketty(2014)의 연구에 기인한 바가 큰데, 그는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극심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세습자본주의로의 진행을 우려하고, 금권정치로 인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참고로 국내에서도 이미 한국조세연구원(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예: 노영훈·김현숙, 2005; 성명재, 2011; 성명재·김현숙, 2006).

지확대를 위한 증세’,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에 대한 지지 정도만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문항은 매우 불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항에 응답함에 있어서 작용할 수 있는 기제들은 너무나 복잡한 것이며 상호작용, 연쇄작용의 가능성 또한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Y라는 가상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사고실험을 실시해보자. Y는 현 정부 및 정치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신의 신념이 재벌, 자산가, 고소득층 편향적인 일련의 정책 흐름에 비추어보았을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조세체계 내에서도 쓸데없는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가복지를 확대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 논리에는 철저히 반대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논리에는 일정 정도 허구성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현 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전혀 묻지 않은 채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 논리,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논리에 대한 지지 정도만을 묻는 설문조사 문항이 매우 불충분하고 불철저하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원천별, 누진도별 증세/감세에 대한 세분화된 문항이 필요하며,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알맞게 제대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 정도에 대한 문항 역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물론 Y라는 특정한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사고실험에 불과하며, 각각의 사람마다 작용하는 기제의 다양성과 복잡성 정도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증거 역시 발견된다. 이현주 외(2013: 제3장)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선정함에 있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책임’이라는 범주로 묶어서 지수화 가능한 15개 문항에 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²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부책임 관련 15개 문항 중 조세부담 의사와 관련 있는 3개 문항을 제거하고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알파(Alpha)값이 0.756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든 변수들의 경우 그 변수를 제거했을 때 계수 값이 더 낮아졌다”는 사실이다(이현주 외, 2013: 67).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값으로 살펴본 신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조세부담 관련 3개 문항을 제외한 정부책임 관련 12개 문항은 하나의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 문항들을 지수화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이현주 외, 2013: 67). 이현주 외(2013)에서 보여준 정부책임 관련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적어도 현재의 문항 구성상에서는 프로그램별 복지 지원 및 지출에 대한 의견과 조세부담에 관한 견해가 쉽게 하나로 통합될 수 없음을, 양자가 비대칭적이거나 서로 질적으로 달리 하는 측면이 있음을, 또는 조세부담과 관련 문항이 좀 더 구체화·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20) 15개 문항에 대응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실업자 지원, 건강 지출, 연금 지출, 교육 지출, 주거 지출, 빈곤 지출, 노인 지출, 장애인 지출, 아동 지출, 근능 지원, 대학 무상, 보육 무상, 경제 세금, 복지 세금, 복지 증세(이현주 외, 2013: 표 3-26).

따라서 다양한 기제들의 작용을 무시한 채, 조세부담 관련 문항이 가지는 비구체성과 모호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한 증거에 기초하여 개념화된 ‘이중성’(최균·류진석, 2000), ‘비계급성’과 ‘비일관성’(김영순·여유진, 2011) 등의 ‘모순성’에 관한 문제제기는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²¹⁾ 문제점의 극복은 설문조사 문항을 개선·보완·확충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수와 이론 간 관련성에 관한 기존 논의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비판이 요청된다. 위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여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수도,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하여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복지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기제들에 대한 설명이나 고려 없이 여성을 특정한 한 지위로만 설정하거나, 성 변수의 분석 결과를 특정한 하나의 이론으로만 배타적으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비단 성 변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계급 변수와 계층 변수가 혼란스럽게 명명되는 연구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또한 복지 수혜 경험 여부 및 수급액 정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지 지위론을 지지하고 계급·계층론을 기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높은 추상수준에서 보면 조세는 잉여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물질적 이해관계의 변화는 주관적 계급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노동력의 재생산, 탈상품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유지, 확대/축소 과정에서 계급과 계급역관계가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관적 가치관 변수까지 포함시킬 경우 계급·계층론의 설명력은 결코 복지지위론이나 자기이해론에 비해 열위에 놓이지 않는다.

셋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구분 문제, 태도 관련 독립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된다.

21) 한편 계급(직종, 종사상 지위), 계층(소득, 재산), 이해관계(성, 연령, 혼인상태, 장애 여부, 복지수혜 여부), 교육, 정치적 성향, 신뢰 등 다양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서 포괄적으로 고려한 이현주 외(2013: 제4장)는 직종, 소득, 재산, 성, 연령, 복지수혜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리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복지의식 연구에서 자주 거론하였던 인식의 불안정성, 또는 인식의 비일관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실정과 그로부터 초래된 의식의 특성이 암시된다. 일정한 경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들을 단순히 인식의 비일관성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층의 영향, 잠재적 복지수혜자의 무감, 그리고 정치적 성향의 작동을 고려한 사회정책의 기획이 필요하다(이현주 외, 2013: 98).”

한국 복지태도 연구에 대한 본고에서의 비판적 평가가 향후 이 분야의 연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승. 2012.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4), 205-230.
- 김도균. 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개발국가의 저축 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사현. 2010a.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 김사현. 2010b.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 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사회복지연구』 41(3), 213-239.
- 김사현. 2012.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9-38.
- 김사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 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27-57.
- 김사현,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김상균. 1985. “한국 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4), 87-113.
- 김상균. 1994. “한국인의 복지의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1), 121-167.
- 김상균, 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1-33.
- 김성한. 1990. “보건사회부 관료의 복지의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수완. 2011.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 공적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2), 251-278.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김영란. 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모. 1980.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각.
- 김영모. 1985. “한국청소년의 사회관”, 『사회정책연구』 6.

- 김영모. 1991. “한국인의 복지의식 재론”, 『사회정책연구』 13, 5-17.
-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211-240.
- 김윤태, 서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동향과전망』 90, 331-378.
-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은지, 안상훈. 2010.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 태도의 성별차이와 복지지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309-334.
- 김형관. 2011.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에 지역구조가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희자. 1996. “한국 신중간계급 복지태도의 내적 분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희자. 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 『사회복지정책』 8, 106-124.
- 김희자. 2013.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16, 59-88.
- 노대명, 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영훈, 김현숙. 2005.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박찬웅, 정동철, 조선미, 김노을. 2014. “복지인식의 사회적 배태성: 영역별 국가의 복지책임 지지 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사회보장연구』 30(1), 105-141.
- 배진희, 신정관. 2014. “복지의식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125-160.
-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서복경, 황아란. 2013. “근로빈곤층 정책평가와 복지비용 부담의지”, 『사회복지정책』 40(2), 179-203.
- 서상목. 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성명재. 2011.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김현숙. 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손동영. 2015. “신뢰수준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신뢰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섭중, 박병현. 1995.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의식 비교연구: 부산, 오사카, 시카고를 중심

- 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7, 181-207.
- 안상훈. 2000a. “복지정치의 메커니즘과 비계급적 균열구조: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기초한 세 가지 지위차원의 이론적·경험적 검토”, 『사회복지연구』 16, 87-115.
- 안상훈. 2000b.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193-221.
- 안상훈. 2002. “계급정치의 회석과 복지국가의 대안적 방어기제: 복지지위모형에 대한 거시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9, 159-181.
- 안상훈. 2005. “친복지동맹의 복지지위균열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비교연구: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89-207.
-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 안상훈, 박종연, 김수완. 2013. “주거 관련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 지위와 연관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4), 375-398.
- 이광훈, 김권식. 2012. “복지인식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준 (quasi) 실험설계를 활용한 복지 지출가치성 (VFM)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3(1), 95-113.
- 이상록, 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 이선우. 201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인식과 영향요인: 자기이익 관점과 정치이념 관점의 비교”,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123-145.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인재. 1998. “IMF 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2, 85-110.
- 이정진, 노대명. 2015. “복지수급자에 대한 시민들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 정당학회보』 14(2), 195-224.
- 이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73-99.
- 이지호, 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257-285.
- 이한나, 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이현우. 2013.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한국정치연구』 22(3), 95-119.

- 이현주, 강상경, 김수완, 이선우, 전지현. 2013.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세훈. 2007. “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사회』 74, 199-226.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1.
- 조명래. 1997. “피터 손더스의 도시사회학”, 『국토』 190, 77-81.
- 조명래. 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
- 조진만. 2014.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4(3), 113-134.
- 주은선,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천현숙. 1997. “텍스와 무어의 주거계층론”, 『국토』 191, 96-100.
- 최고은. 2016.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125-150.
- 최균, 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최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57-83.
- 최태욱 편. 2013. 『복지 한국 만들기: 어떤 복지국가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후마니타스.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5. 『공단근로청소년운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연맹.
- 홍경준, 김민성, 김사현. 2013. “보육정책 이슈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과 복지정치”, 『사회복지연구』 44(2), 265-291.
- 황아란, 이지호. 2015. “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1(2), 177-210.
- Ahn, S.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nivesitetstryckeriet.
- Andreß, H.-J. & T. Heien.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Blekesaune, M. 2007.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393-403.
- Castles, F. 1998. "The Really Big Trade-Off: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Acta Politica* 33(1), 5-19.
- Jaeger, M. 2006. "What Makes People Support Public Responsibility for Welfare Provision: Self-interest or Political Ideology? A Longitudinal Approach", *Acta Sociologica* 49(3),

321-338.

Kemeny, J. 2004. "Home Ownership against the Welfare State: The Thesis and the Evidence", Plenary address, ENHR Conference, Cambridge.

Kemeny, J. 2005. "'The Really Big Trade-Off' between Home Ownership and Welfare: Castles' Evaluation of the 1980 Thesis, and a Reformulation 25 Years on", *Housing, Theory and Society* 22(2), 59-75.

Korpi, W. 1980. "Social Policy and Distributional Conflict in the Capitalist Democracies. A Preliminary Comparative Framework", *West European Politics* 3(3), 296-316.

Korpi, W. 1989. "Power, Politics and State Autonom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During Sickness in Eighteen OECD Countries since 193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09-328.

Piketty, T. 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글항아리.

Shin, H. & S-H. Kim. 2015. "The Developmental State, Speculative Urbanisation and the Politics of Displacement in Gentrifying Seoul", *Urban Studies* 53(3), 540-559.

Stock, J., J. Wright & M. Yogo. 2002. "A Survey of Weak Instruments and Weak Identification in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20(4), 518-529.

한겨레. 2015. "소득별 복지 확대 지지 갈려...복지태도 '정상적 경로'", 2015.4.28. available at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88671.html>. (2016년 6월 12일 최종 접속).